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수행과제명 ...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과제책임자 ... 김 이 선 연구위원

☎ Tel: 02-3156-7158, ✉ e-mail: yskim@kwidimail.re.kr

요 약

2000년대부터 정부의 다문화 관련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동질성에 대한 ‘신화’를 유지해왔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정책이 형성된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과이며, 특히 결혼이민자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이주민 집단 별 정책이 불균형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사회통합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이 부재한 상태임. 또한 ‘지원’ 중심, 자녀세대에 대한 결핍론적 시각 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되어 온 다문화사회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배경 및 문제점

- 이주민 및 다문화에 대해 사회적으로 무관심했던 한국사회는 20세기 말부터 초-국가적 이주가 늘어나고 ‘정주형 이주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함
- 2000년대 중반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정부의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일정한 방향성, 체계성을 갖춘 정책으로서의 성격은 미약하였음
- 2000년대 말 다문화가족 전담부서 설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및 시행 등 다문화사회 정책은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룸
-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였음

2. 조사 및 분석결과

□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

- 동질성에 대한 ‘신화’를 유지해왔던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정책이 형성된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임
- 관련 법 제정 및 시행, 법적 기반을 갖춘 정책계획의 수립과 시행, 전담부서 설치 등이 뒷받침되었으며 결혼이민자 지원 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 내국인 다문화이해 증진, 체류·정주자 생활 편의 제공, 외국인 인권 보호 분야는 이전보다 지원이 늘어나고 기본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졌으며,

사회적 인식 환기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음

□ 다문화사회 정책의 한계

-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이 발달하면서 이외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은 정책에서 제외되어 옴. 특히 이주민 집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는 사회적 분리 우려가 크지만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설정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학생 또한 소수자로서 인종차별,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부재한 상황임
-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중심 정책으로 인하여 이들이 충분한 역량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음
- 이주민 자녀세대에 대하여 언어 발달이 어려운 집단으로 보는 결핍론적 시각 등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조치는 미온적임
- 다문화사회 정책에 있어서 주류사회의 사회 환경과 성원들의 수용성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소극적 접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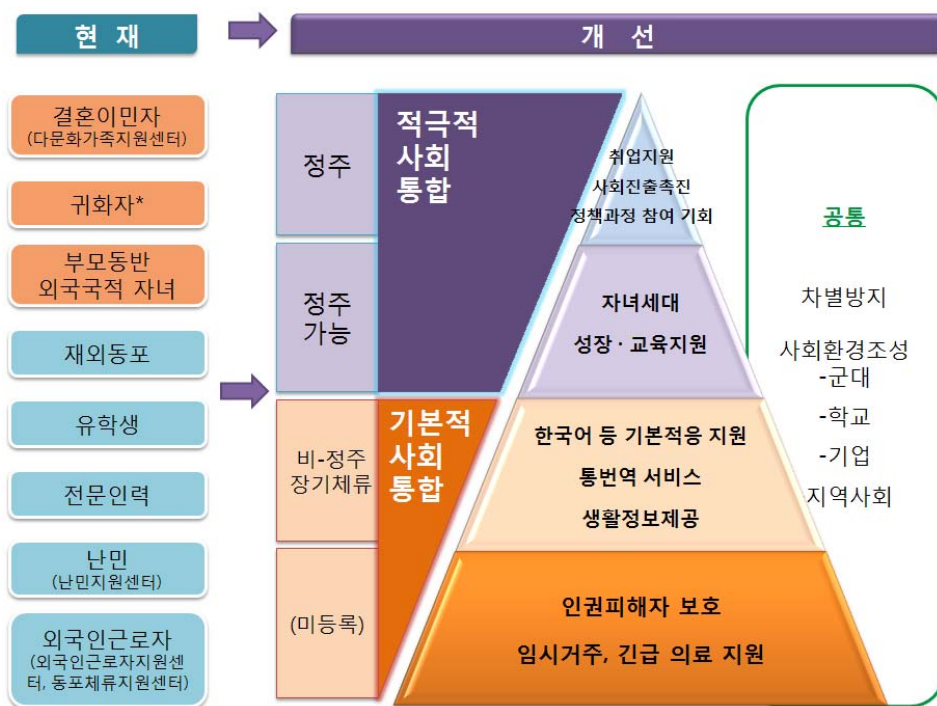
3. 정책제언

제안1) 이주민 대상 정책에서 다문화사회 정책으로의 전환

- 한국인과 외국인, 외국인 내에서의 체류자격, 한국인과의 관계성 등에 따른 구분선을 절대적 기준으로 상정하고 다문화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오직 일부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존의 외국인정

책,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이주민 지원, 이주민 증가와 관련된 문제의 예방, 다문화사회의 긍정적 측면 구현을 위한 다양성 관리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다문화사회 정책으로 전환

제안2) 다차원적 사회통합 모델에 기반한 정책대상 재규정



제안3) 정주자의 사회참여를 통한 적극적 사회통합 도모

- ‘다양한 종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사회 주체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 하는 것을 다문화사회 정책의 핵심 목표로 통합
- 정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각적 조치
 - 사회 각 분야에서 완전한 성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이주민의

역량 제고 + 활동 저해 환경 개선 + 언어·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제안4) 자녀 세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대응 강화

- 외국국적 자녀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학교교육체계 유연화
 - 외국국적 자녀의 편·입학 허용을 각급학교 학교장의 재량권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전환, 관련 법 개정 등
- 이주에 따른 교육적 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
 - 특별학급 설치 기준 마련, 해당 학교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는 제도 도입 등
- 후기 청소년기 입국 이주민 자녀를 위한 조치
 - 일반학교로의 통합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완적 교육 체계, 취업을 염두에 둔 진로 설계, 교육 훈련 기회 제공에 초점

제안5)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환경 조성

- 다문화사회 전개에 적합한 사회적 규범 확립
 - 종족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 방지를 골자로 하는 법 제정 등
- 다문화가족 자녀의 군입대를 대비한 병영환경 조성
 - 군인복무규율에 ‘차별행위 금지와 지휘관의 의무’ 명문화 등

제안6) 이주민의 기본적 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이주민 일반의 기본적 생활 적응 지원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통번역,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제안7) 모든 이주민의 인권과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강화

- 폭력 등 심각한 인권 피해 관련 상황에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사안

- 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 가이드라인 확립 등
- 미등록 체류상태에 있는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조치

제안8) 거버넌스 발전을 통한 지역 정책 활성화

- 다문화화의 구체적 양상에 있어 지역적 다양성, 지역 차원의 특수한 정책의제에 대한 대응 강구
- 정책 거버넌스 참여자로서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성 증진
- 이주민의 거버넌스 참여 기제 마련

제안9) 일반 시민의 다문화사회 정책 참여 기제 마련

- 다문화사회 정책의 주요 대상을 이주민과 동일시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일반시민(내국인 주민) 등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계기 마련

4. 기대효과

- 다문화사회 정책의제 구체화 및 확대
- 다문화사회 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관계부처 : 법무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